

보 도 해 명 자 료

(14.3.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기존산업 성장 한계 불구…미래 제조산업
진입장벽 첩첩” 기사(14.3.18, 문화일보 등)

1. 기사내용

-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기 사업자와 전력 거래소로 한정되어 있어, 관련 기술개발이나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차단되어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‘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’ 시행령에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①서비스 제공, ②기기·제품 제조, ③기반 구축 사업자로 구분

○ 이중 서비스 제공 및 기기·제품 제조사업분야는 보급사업과 확산사업 등을 위주로 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중

- * (지능형전력망 사업) ICT 사업자 27개 (총 등록 사업자 수 106개)
- * (확산사업) 8개 예비 사업자 중 ICT 업체가 주관기관인 컨소시엄은 3개 컨소시엄(KT, SKT, 포스코ICT)

- 한편, 송·배전망 등 기반구축사업은 경쟁영역인 발전과 판매 사업과는 달리 비경쟁영역인 공공 인프라로서 해외의 대부분 국가들도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 (010-4603-9624),
조원철 사무관(010-4249-4707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